

국힘 내부 “윤석열 자진 탈당” 촉구 기류 확산

이정현 “김 후보에게 권고 제안”
김용태 “금주 탄핵의 강 건널 것”
김문수 “계엄권 발동 부적절” 사과
‘관계 정리’ 제도적 장치 마련 전망

국민의힘 내부에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글탈당의 당 개혁을 할 각오와 구체적

실행을 국민에게 날마다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탈

당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명·출당 등 강제 조치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기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필두로 당·선대위 지도부에 주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명자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 내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에 관한 질문에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것(탄핵의 강)을 넘여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고 말했다.

‘탄핵의 강’을 넘어갈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지명자는 이날 전국위원회를 끝으로 최종 인준 절차를 마치면 비대위원장으로 서 주도권을 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전·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 등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탈당’ 김상욱,李 지지 선언 “가장 보수다운 후보”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 필요”
李 “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사진)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



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능력을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인 사회

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전라남도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하면 좋겠다”면서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李·金 격차 줄어든 것… 치열한 백병전 대비”

김민석 “민주 진영 전열 정비해야”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시도될 것”
강위원 “경거망동 금물” 투표 독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6·3대선 판세와 관련,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측 지지층의 막판 결집이 예상된다”며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한 긴장과 각오로 민주 진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압도적 정권교체론’에 대해선, “당에서 공식적으로 압도적 승리라는 방향과 슬로건을 정리해본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동의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막판 결집하면 지금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 마지막날까지 절실함과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 극복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후보의 개인적 역량 차를 종합할 때, 최소한 정당 지지율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정도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도 경계했다.

민주, 인구미래위 출범… “출산율 1.5명으로”

행복출생·가족 등 7개 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산 공약을 지원할 후보 직속 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구미래위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람이 존중받는 인구 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가 끝까지 시도될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시도의 이유와 성사의 가능성을 다 보고 있으나 성사가 된다 해도 그 성적은 허망할 것이다. 양자구도, 3자 구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중도 보수 세력의 영입과 결합도 계속될 것”이라며 당 중앙선대위에 참여한 권오을·최연숙 전 의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시작의 시작이 될 것이라 본다. 진행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인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고문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다 이긴 선거 아니냐’ 한다. 아니다. 다 이긴 선거란 없다. 경거망동 금물”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줄 것을 지지층에 당부했다.

강 고문은 “후보가 방탄복 입고 저격과 테러를 걱정하는 눈물과 공포의 선거”라면서 “실제는 ‘박빙 3%’ 경쟁으로 알고 악작같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 ‘댓값’을 달아야 한다.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부터 점검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과 공직자의 투표 호소는 마땅한 의무”라며 투표 독려를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AI 시대, 전담 부처 필요”

공동 학술대회서 ‘AI 디지털부’
인구·기후 대응 조직신설은 ‘신중’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강국’을 발표한 가운데, AI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부처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처는 전날 국회에서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행정조직법’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I 시장과 환경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급격히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에 대선 주요 후보들도 잇따라 ‘AI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 부처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AI 환경 속에서 한 부처가 모든 정책을 담당하기는 어려워진 실정이다.

현재 AI 정책의 경우는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창업(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성장(산업통상자원부), 이용자 보호(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있다. 다부처 소관 사안 대응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자체의 정책 조정 기능이 없어 실제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황장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는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업무의 조정을 넘는 새로운 정부 조직인 가칭 ‘AI 디지털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기존 부처의 저항이나 예산 부담 등 혼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에 긴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기후 문제가 산업이나 경제 관련 부처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1.5명까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대한민국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위원회는△행복출생△가족△청년·시민△지역 인구감소 지원△이민·외국인△주거·도시환경△산업 등 7개 분과를 뒀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고문을, 강선우 의원은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 모경중·박홍배·서미화·오세희·임미애 의원,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부위원장이고,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자문위원이다.

서울=김선욱 기자